

무안국제공항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 육성 동력 확보

전남도, 미국 KMC와 3480억 항공정비 투자협약 연간 화물기 10대 생산·1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글로벌 항공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본격적인 동력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미국 화물기 제조 (P2F) 전문기업인 KMC와 3480억원 규모의 항공정비 (MRO)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봉철 KMC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MC는 2028년까지 무안국제공항 내 약 9만9000㎡ 부지에 대형 화물기 개조를 위한 글로벌 조립라인을 구축한다.

1단계 사업은 보잉 777-300ER 등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부가형식증명 (STC) 기반 개조사업으로, 연간 대형

화물기 10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직접 고용 인원은 약 1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기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항공산업 생태계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올해 3월 활주로 연장 (2800m→3160m)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형 기종의 안정적 이착륙 여건이 갖춰진다.

도는 2026년부터 200억원 규모의 '항공 MRO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정비 기술 고도화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2028~2030년) 사업도 예고됐

다. KMC는 추가로 1500억원을 투입해 민·군 통합 항공정비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관 대형기 정비 물량의 국내 환류와 기술 자립 기반 확보가 목표다.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될 무안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항 인프라, 산업단지, 항공정비 기술이 결합될 경우 무안시 서남권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봉철 KMC 회장은 "대형 항공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무안에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남이 세계적 MRO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청 접견실에서 박봉철 KMC 회장과 무안항공특화단지 MRO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대한민국 시·군·구협의회, 자치분권·행정통합 협력

'5극 3특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 발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자치분권과 행정통합 대응에 힘을 모았다.

2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9명의 시·

도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5극 3특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 강화 실시, 지방교부세 확충 및 보통교부세 차기 직접교부 등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와의 협의 의무 제도와 등의 내용을 담은 '5극 3특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

동건의문'을 발표하며, 기초지방정부의 역령강화와 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예산회계규정 제정 (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도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따른 협의대응계획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회의를 마친 회장단은 ACC와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현장을 방문해 1980년 5월의 민주화 정신을 되새겼다. 참석

자들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시민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주민 중심 자치분권의 근간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정회원 226개, 준회원 2개)가 참여하는 기초 지방정부 협의체다.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딥페이크·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내달 5일부터 선거 '90일 룰' 적용

의정활동·광고 출연 제한 전남선관위, 위법 사전 차단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3월 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도 제한되며,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등도 사적 해야 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 사항을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딥페이크 규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상이나 음향은 제작 단계부터 유포·게시까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위법이 된다. 기술 악용에 따라 방역 단계와 이동 제한 범위가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되면 동일하게 제한된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치 행위로 활용돼 온 출판기념회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현직 의원들의 대면 보고 활동도 멈춘다. 보고회나 각종 집회를 통해 선거주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개 행사 형식이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도 제한되며, 입후보 예정 공무원·언론인 등도 사적 소통을 구분에 규제하는 구조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앞세운 광고도 규정된 방식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종 문화·연예·사건물 등을 활용한 우회 홍보는 제약을 받으며, 후보자의 언론 광고 출연 역시 제한된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정치적 노출을 확대하는 통로가 크게 좁아진다.

출마를 준비 중인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기한을 넘기면 출마나 선거사무 종사가 불가능하다.

선거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례 육용오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초동방역팀·현장지원관 파견...가족 처분 등 즉각 조치

전남도가 구례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각 초동방역과 가족 처분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구례군 용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9000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방역지역 예찰검사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립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가족위생방역지원관 파견을 요청했다. 현장지원관 2명도 추가로 파견해 발생 원인과 방역 미흡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 가

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인근 소화천과 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에는 가용 소독 인력을 집중 배치해 소독을 강화했다. 감염 개체의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사에 속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도 정밀검사와 방역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와 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시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27일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명령 이행 여부

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임중환 상황"이라며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장 출입 통제, 축사 전실 이용, 하루 2회 이상 소독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현재 전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9건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영암·곡성·구례 등 4개 시군에서 총 9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 방역 단계와 이동 제한 범위가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興,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피해구제책 발표...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

신타사기를 비롯해 무권 계약 (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피해자에게 최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주택의 매각·매입 등으로 실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제도다.

당정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타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한다.

아울러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한다.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주체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해 공동담보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 위원장은 전했다.

향후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도입·추진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년 운전석 비운 자율차 상용화...광주서 실증

정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제시

정부가 내년부터 운전석을 비운 채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도심 속에서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한 광주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 실증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 (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 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한 광주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증용 데이터는 표준화에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 (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허용 후구제'를 원칙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3월 3일 정월대보름날 개기월식 관측 가능

한국천문연구원은 다음 달 3일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정월대보름날 개기월식은 1990년 2월 10일 이후 36년만이다.

이번 개기월식은 날씨가 좋다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달이 뜬 이후부터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기월식은 지구 반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반영식을 시작으로,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식이 오후 6시 49분 48초에 시작된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오후 8시 4분에 시작되며, 오후 8시 33분 42초에 최대가 된다. 오후 9시 3분 24초에 개기식이 종료되며, 이후 부분식은 오후 10시 17분 36초에 끝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월식은 2028년 7월 7일 부분월식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1면 '무안공항...'서 계속

이어 "정부가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완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줄 때 비로소 무안공항은 정상 운영의 계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발 절차

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유가족 동의를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7월 재개발을 목표로 정부와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